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b>재외동포청 최적지</b> <b>인천</b> <b>본입니다</b>
	배포일자	2023년 3월 31일(금) 총 4매	
담당 부서	에너지산업과	담당자	• 전기전력팀장 이윤현 ☎440-4346 • 담당자 김종현 ☎440-4357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관내 곳곳에 전기차 충전시설 905기 확충**  
**- 환경부 주관 사업 7개 선정, 국비 161억+민간 172억 등 333억 투입 -**  
**- 수요조사 등 거쳐 급속 706기, 완속 178기, 전기이륜차 21기 설치 -**

인천시는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를 위해 관내 곳곳에 총 905기의 충전시설을 확충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환경부가 전기차 및 이륜차 충전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주관한 ‘2023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에 7개가 선정돼 국비 161억 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시에는 지난해에만 1만 1,900대의 전기차가 보급되는 등 지난해 말 현재 2만 2,267대의 전기차가 등록돼 있다. 반면, 설치된 충전시설은 5,424기로 전기차 보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실정이다.

시는 가파른 전기차 보급에 따른 충전 불편을 해소하고자 이번 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해 충전 편의시설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지역 특성에 맞게 연계하는 사업이다. 국비 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없애는 대신 민간투자를 끌어내는 사업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민간사업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7개 사업은 광역사업(인천시) 5개, 기초사업(남동구) 1개, 민간사업(충전사업자) 1개이며, 국비 161억 원과 민간투자 172억 원 등 총 33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먼저, 전기차 인프라업체 이지차저가 민간투자로 4개 광역사업에 참여한다. 「물류·관광 허브 경제자유구역 중심 친환경 충전 편의시설 거점 구축사업」에 100억 원(국비 49억, 민간 51억)을 들여 중구, 동구, 미추홀구 일원에 급속 224기, 완속 108기를 설치한다.

「글로벌 거점 송도국제도시 전기차 충전 편의시설 구축사업」에는 89억 원(국비 43억, 민간 46억)을 들여 연수구, 부평구를 중심으로 급속 205기, 완속 16기를 설치한다.

「국제 금융·관광 유통 촉진 청라국제도시 전기차 충전 편의시설 허브 구축사업」에는 75억 원(국비 36억, 민간 39억)을 들여 남동구, 계양구, 서구 일원에 급속 153기, 완속 35기를 설치한다.

「강화도 역사 문화 관광 클러스터 친환경 충전 편의시설 구축사업」에는 39억 원(국비 19억, 민간 20억)을 들여 강화군, 옹진군에 급속 89기, 완속 1기를 설치한다.

모터사이클 전문업체 디엔에이 모터스는 민간투자로 광역사업인 「전기이륜차 BSS(공유 배터리 충전스테이션) 관련 문화관광 트렌드 조성 충전 편의시설 구축사업」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사업비 5.3억 원(국비 2억,

민간 3.3억)을 들여 관내에 BSS 21기를 설치한다.

전기차 충전기 운영업체 SK일렉링크는 민간투자로 기초사업인 「인천 남동구 All Day with EV사업」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사업비 10.9억 원(국비 4.2억, 민간 6.7억)을 들여 남동구에 급속 15기, 완속 18기를 설치한다.

전기차 충전업체 펌프킨이 민간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전기버스 리더, 선진버스 강화터미널 사업」은 사업비 12.5억 원(국비 8억, 민간 4.5억)을 들여 강화터미널 버스 차고지에 급속 20기를 설치한다.

이 밖에 민간 충전사업자의 투자로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일원의 공영주차장 각 1개소씩을 발굴해 초급속(350kW), BSS 등이 포함된 복합스테이션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 충전사업자가 급속충전기 유지보수 및 고객센터 구축을 위해 약 50억 원을 별도 투자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연인원 20명의 고용효과도 기대된다.

시는 오는 4월 7일까지 충전시설 설치 후보지에 대한 수요조사, 현장 조사 등을 마무리하고, 설치순위를 조정해 최종 설치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여건에 따라 올해 안으로 충전시설 설치 및 검수가 진행되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광근 시 에너지산업과장은 “이번 국비 확보와 민간투자로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되면 충전사각지대 해소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전기차와 이륜차 충전 편의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참고 사진 : 전기차 및 이륜차 복합스테이션 사례 >